

민주당 '텃밭' 광주...전략공천은 없다

공관위, 유력후보지 동남을·북구갑 경선지역으로 확정

"8곳 경선" vs "나머지 지역 전략공천 가능"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전략공천'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1차 경선지역 52곳을 발표했다. 광주는 동구남구읍과 북구갑, 북구을 등 3곳이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동남을은 김해경·이병훈, 북구갑 정준호·조오섭, 북구을은 이형석·전진숙 등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벌인다.

그동안 총선을 앞둔 광주 정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전략공천' 여부였다.

이해한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앞으로 광주에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당 안팎에서는 최소 1곳, 많게는 3~4곳까지 전략공천설이 나왔다.

전략공천 후보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MB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낸 이 광범 변호사,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에서 활동한 김남국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인제영입 3호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과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인재영입 20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등도 포함됐다.

전략공천 대상지로는 '당원 욕설·폭언·갑질' 과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동남을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북구갑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중앙당이 1차 경선지역으로 동남을과 북구갑을 선정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1차 경선지역에 중앙당이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을 포함하면서 '광주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광주 8개 지역 모두 경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략공천이 없다'고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선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경선지역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계속 '잡음'이 일고 시끄러우면 '사고지역'으로 분류해 전략공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과 1차 경선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광주전남지역 경선과정에서 잡음을 최대한 줄여 전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중앙당의 기조이지만 그럼에도 시끄러우면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8곳 중 1차 경선지역으로 확정된 3곳 외에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나머지 5곳 중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차 경선지역 발표 직후 "비교적 검토가 용이한 곳, 우선 경쟁이

이미 치열해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며 "취약지역, 후보 결정이 빨리 이뤄지는 게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 곳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가 1차 경선지역 선정 기준을 밝힌 셈이지만 광주에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광산갑의 경우는 '법벌 당원 모집' 의혹으로 갈등이 있고, 경쟁은 어느 곳보다 치열하다. 광산을은 '관리당원 불법 조회'와 후보단일화로 불공정경선 우려도 제기된다. 동남갑과 서구을은 각각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1차 발표한 경선지역을 보면 후보 중에 문제가 있거나 컷오프를 시켜야 할 곳, 일부 후보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한 곳이 제외됐다"며 "1차 경선지역 결과만으로 광주에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관위가 2차로 15일 발표한 43개 지역에 대한 심사 결과에 광주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 발표 때까지 '전략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당·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민의당 시도당 창당 본격화

안철수 "민심의 바다 들어갈 것"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하는 '국민의당'이 16일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을 창당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인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당과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열어 "빠른 속도로 창당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민심의 바다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열린 경기도 창당대회에서는 '경제'를 집중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3040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손님들 수가 적어서 편하겠다' 등의 국무총리 발언은 국민 삶에 무심한 속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열린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짚었다. 안 위원장은 "서울은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데 숨 쉬고 사는 문제까지 어렵다"며 "정부의 노력 이외에도 민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현 정권의 무능과 아마추어적인 상황인식, 다른 하나는 낡은 정치 세력들이 독식하고 있는 정치 양극화 문제다.

뉴스1

황교안, '광주의 상처' 치유?...5·18에 깊은 생채기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를 들어서려다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광주를 찾고 광주시민을 만날 것이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가슴에 깊이 새길 것이다."

지난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

동 기념식이 끝난 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보면 광주의 상처를 보듬기보다는 덮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5·18망언 논란으로 제명된 이종명 의원을 임명시켰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행사를 주최하면서 "5·18이 폭동이고 유공자들이 괴물"이라는 망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5월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의 제명 이유가 5·18망언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총선에서 앞 번호를 얻기 위해 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보내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의 최근 발언도 광주시민들에게 상처를 줬다.

황 대표는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앞 떡볶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1980년, 그 때 뭐 하러든 무슨 사태가 있었죠? 학교가 휴교되고 뭐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맞섰던 5·18민주화운동을 '무슨 사태'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휴교령을 떠올렸을 뿐 광주와는 상관 없다"며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광주 각계에서는 황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해묵은 '지역감정'을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 폄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5·18 진상조사위원 구성도 제대로 1년이 넘게 걸렸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광주와 5·18에 대한 진정성 있게 다가선 적이 한번도 없다. 최근 한국당과 황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단적인 사례"라며 "호남이 왜 한국당에 등을 돌리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면에서 이어짐>

이들은 17일 3당 합당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공식 출범시키고 지역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세대교체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데다 '도로 호남당'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4년 전 호남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정치적 기반을 다진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 정치 재개와 함께 중도 세력을 표방하며 만든 신당의 영향도 관심이다.

안 전 의원은 보수와 진보라는 2분법적 대립을 배척하고 '반(反)문재인 연대'를 내세운 통합 움직임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며, 중도 세력을 끌어모아 이번 총선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의 인기가 예

전만 못하고 지역 기반도 광주 광산울의 권은희 의원을 빼면 사실 없는 상태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도 올해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 투표'의 위력이 커진 만큼 정당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모든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고 진보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광주·전남지에서도 최소 20%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4·15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안정을 위해 제1당의 지위를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역구 수성을 노리는 민주통합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 진보정당들의 각축전이 될 전망이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